

“달빛고속철도는 동서 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초석”

DJ센터서 조기 건설 촉구 토론회

광주·대구 산업 시너지 효과 기대
수도권 1극 경제권 대응 기여
인구유입 낙후지역 활력성 회복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양 지역의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륙 광역경제권의 새로운 초광역 산업연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열린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은 달빛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광주와 대구의 지역특성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 팀장은 또 “달빛고속철도가 정착하는 자치단체는 문화·자연·휴양·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로 수도권 1극 중심의 중부권 경제권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로 지역거점 중심의 경제권 형성함으로써 남부경제권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초광역 산업연계 생태계 구축이 효과를 나타낼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500만명의 경제기반인 대구·경북의 물, 로봇, 미래자동차, 배터리, 백신, 반도체 산업이 350만명의 경제기반인 광주와 전남의 인공기능, 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고 상생협력하면 1000만명 이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개통으로 인해 기존의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한 영호남 역사, 문화, 관광 화합의 선도도시로 전환될 것이다”면서 “그동안 양 지역의 상생 협력의 결과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달빛고속철도는 15년간 경제적 효과가 GDP의 6.5% 상승하고, 호남과 영남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한 물적교류 활성화와 내륙 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광주~목포권과 경전선, 대구~포항권과 동해선까지 연결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는데, 달빛고속철도와 교차하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의 남북 축 철도망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양항, 포항·영일만항 등과 고속철도가 연계돼 항만 활성화도 기대되고, 무안공항과 대구공항 또는 남부권 신공항의 연계성도 향상돼 거점공항의 활성화도 높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무엇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인해 인구유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늘어나 지역의 활력성이 회복돼 역세권 형성 등 유통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했던 장석주 광주지역혁신협의회장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고, 영·호남 6개 광역시·도 및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달빛고속철도는 경제·문화·관광 교류 및 남부 경제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앞으로 4주 고비...방역 강화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를 두고 시민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으며 3차 접종도 본격화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슬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그

리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반드시 넘어야 할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단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부동산·청년’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드라이브

20~40대 서울 무주택자 간담회
서울대 강연...확장적 재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부동산·청년·경제 등을 포인트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거론되는 집값 급등,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약화시키고 집권시 차별화된 대책을 약속하며 20~30세대 표심에 호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유지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이 차별화 행보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0~40대 무주택 서울 청년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천한다는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를 듣고, 제안을 반영해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 정책들을 다듬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 강연에서는 “국가의 빛이나 개인의 빛이나 빛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이전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취프리’ 등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안전 보상’ 등 적극적 정책의 관철을 주장한 기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 홈페이지 ‘커피숍’ 게시판 이용자와 실시간 댓글 소통을 통해 2030세대 중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년 행보를 이어갔다. 또 전국 사·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선대위의 쇄신·개편에 맞춘 시 지역위원회의 혁신적 선대위 구성과 당무 변화를 독려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가혁명당 ‘33정책’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1.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1억 원 지급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2.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지급 시작)
3. 결혼시 3억 원 지급[결혼자금 1억+주택자금 2억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4.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 (")
5. 육아수당 (유아 1인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
6. 3종 무료카드 지급(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안경 무료제공 카드/청소년 안심식사 카드) (")
7. 1억 미만 소액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8.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단체장 선거 폐지
9.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으로 대학 결정)
10.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국민배당금 재원마련 방법

1. 국가예산 70%절약으로 400조 마련
2. 36가지 세금 통합으로 100조 마련
3. 재산비례 벌금제로 100조 마련
4.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100조 마련
5.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6. 양적완화로 코로나 긴급자금 마련

국가혁명당
02-783-8011~5